

한일/남북/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 만들기

동북아 정세가 답답하다.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그리고 북일 관계 역시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긴장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이 넘도록 정상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 관계 역시 지속적인 도발과 비난이 계속 되고 있다. 북일 관계 역시 별반 다름이 없다.

이번 일본공간 좌담회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원인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1월 17일

장 소 국민대학교 북악관 1310호

참석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석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장)

Ⅲ 동북아 외교의 현주소와 과제

이원덕)

이번 좌담회의 중심 주제는 ‘동북아 평화 만들기’입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도 막혀 있고, 한일 관계도 북일 관계도 막혀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면 동북아 평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동북아 외교의 현 주소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두 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리죠. 하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외교의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올 6월 이후, 긴박하게 펼쳐진 여러 외교적 이벤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평화지향적인 동북아 외교의 돌파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김기석)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이후 약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남북관계나 북일관계가 꽤 막혀있던 지난 2년여의 시간과 비교할 때 금년 6월 이후의 소위 종전 70주년과 관련한 일련의 주변국 외교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지난 2년과는 조금 달라진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 성과가 어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남기정)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동북아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북아에 대한 논의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은 이전에 비해 더 나은 외교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지형에 비해 외교가 과거의 틀에 얽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위주의, 양자주의 외교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에 일어났던 다이나믹스는 사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에서 일어난 두 가지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이전 3년에 비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한다면 이룬 것보다는 아직은 숙제가 훨씬 더 많은 상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근식)

저도 큰 틀에서 구조적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외교는 첫째, ‘통일우선론’에 메이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사실, 요즘 우리 외교가 통일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시진핑을 전승절에 만났을 때도 통일이야기를 하고, 오바마를 만나서도 통일이야기를 했죠. 지금의 다자외교도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좀 허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동북아 지형 속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화외교가 훨씬 더 일차적입니다. 그것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평화체제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 안착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평화외교는 완전히 실종되어있고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아무 역할이 없는데 통일의 교만 말 한다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못하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평화 만들기’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민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냥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둘 다에게 비위를 맞추려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사이에서 치여서 일본이랑도 내키지 않는 악수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원덕)

저는 올해 6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6북한 월 이전을 보면 대미, 대중 관계는 그런대로 좋다고 보는데, 역시 동북아 외교 문제의 핵심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일관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 6월 이전까지 2년여 동안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는, 대북 관계의 경우, 그 관계가 경색되고 고착되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느라 전향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관계에서는 ‘핵 문제’에 갇혀서 그리고 대일 외교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포획되어 동북아 외교 전체가 정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근린 외교는 대북, 대일 문제에 막혀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전반기의 이런 모습에 비하면 하반기부터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봅니다. 우선 8·25 남북한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 또 10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서 급기야 한일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2년 반 동안 꿈쩍 달짝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죠. 우리의 외교 주도권을 그나마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기정)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이원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외교라고 하는 것을 제 용어로 하자면 ‘핵심 삼각형의 안정화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을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삼각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외교가 동아시아에서 우리 외교가 주도해야 할 평화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외교, 특히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만 너무 치중했다고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외교는 ‘핵심 삼각형의 안정화’를 토대로 하여 이로부터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외부의 ‘배경 삼각형’을 안정화하는 외교로 전개해 나가야 했는데, 그 두 개의 삼각형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10년 전의 외교와 비교했을 때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
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외교는 양호한 한미관계, 양호한 한중관계를 남
북한 관계 개선으로 연결하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동시에 개선해서
핵심 삼각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다시 배경 삼각형으로 연결
시키는 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
부의 외교는 배경 삼각형을 가지고 북한과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기 때문
에 핵심 삼각형이 불안한 상태로 머물러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가 풀리지
않는 구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역시 우리 외교가 핵심 삼각형의 안정적 운영에 치중해야 한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는 핵문제 때문
에,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꽉 막힌 상태였고, 그 때문에 동북아
외교 전반이 위태위태한 구도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한일관계를 움직이고 남북관계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가운데 삼각형을 안
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배경 삼각형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끌어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덕)

네. 지금까지 한국 동북아외교의 현주소와 향후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동북아지역 평화 만들기에 한반도
와 일본 관계가 어디까지 그 역할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죠. 이 주제로 넘
어가기 전에 아베 담화, 8·15 경축사, 남북 간 고위급 협상, 9월 전승절
방중에 대한 대목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관계와 동북아지역 평화 만들기

김기석)

그 이전에 제 생각에는 한국 외교의 기본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3가지 정도의 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담론은 일본 전문가들 사이의 이야기고, 진보적 진영에서는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수적 진영에서는 미국 관계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역의 국제정치적 동학이 미중 관계를 기본으로



김기석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G2 컨텍스트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외교의 과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과거 냉전기의 한국 외교는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안보도 전부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사적 측면, 안보적 측면 혹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훨씬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외교가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근식)

네. 남기정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겠지만, 2000년 한반도의 외교적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DJ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일정하게 추동해낼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생각해본다면, 여전히 동북아에서 우리가 갖는 외교적인 역량, 또는 외교적인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핵문제나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긴장완화문제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북한과 직접 대면해서 남북대화나 남북관계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manage)이 가능한거죠. 이런 공간이 열리면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남북관계를 추동 해내면 원활한 남북관계로 한반도의 평화가 상승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또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과 조금 더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런 효과가 봉쇄되어버렸죠. 남북관계라고 하는 우리 외교의 1차적 지렛대가 봉쇄되어있기에 우리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가야하고, 또 일본에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사이의 G2구조라는 것이 사사건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식입니다. 사실 최근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TTAD든 TPP든 전승절 참석이든 계속 매 사안마다 G2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외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고, 오히려 양 쪽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북관계라는 지렛대가 상실되어버린 상태에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압박이 되고 강요가 되죠. 수세에 몰려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처해진 외교적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원덕)

북한을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외교사적으로 긴 시각에서 보면 한반

도가 동북아지역에서 나름 주도권을 가지고 외교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은 비로소 1990년대 이후의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대 이전의 중화질서 속에 있을 때 조선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대륙의 중화질서를 주도했던 중국과의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해방과 동시에 밀어닥친 냉전체제 하에서도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고 외교적 선택 폭은 지극히 작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고, 동북아시아에 세력균형이 유동화 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에게 외교적 선택권이 비로소 주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세기 조선도 외교적 자율성은 있었지만 그 때와 크게 다른 점은 19세기하의 조선은 그야말로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였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었던 것에 비해 21세기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국력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적 고민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북한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김근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복잡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시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컨센서스, 외교전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내부가 분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국내정치의 진영 논리에 의해 갈라져 있고 진영 내부에서도 혼란과 분열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서 입장이나 견해차가 워낙 커서 나름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사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우리에게

는 그야말로 나름 외교적 지평을 우리의 주도하에 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고 북한에도 농락당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못 풀어가는 상황이니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정)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 외교가 가장 활발하게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98년, 2000년, 2002년의 한국 외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98년의 한일정상회담으로 시작해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21세기 진입을 앞뒤로 해서 5년 동안에 전개된 한국의 외교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1998년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인 대일 외교를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주의 외교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남아시아를 중시하면서 아세안을 무대로 한 외교를 한일관계의 개선과 동시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해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안+3’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경제협력 비전그룹’의 창설을 제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해의 제3회 아세안+3에서는 한국이 중심

이 되어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때 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한일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는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긴 힘으로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며 남북정상회담까지 나아갔다면 겁니다. 이러한 외교의 방향성을 우리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석)

그 부분, 예컨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중일이 처음 만날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999년 아세안+3 회의 당시에 오부치 수상이 처음 만나자는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 해 회의에서 오부치 수상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3국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중일 정상이 처음 비공식적인 모임을 처음 시작한 2000년 회의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었죠. 말하자면 그 당시 지역협력의 전개 상황을 보면 동시다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건이 중심적인 계기가 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과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벌어졌죠. 물론 동아시아 협력 자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명확한 계기가 있기도 하지만요.

한일관계의 변화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능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 시기에는 다면적인 여러 형태의 관계개선, 그리고 지역주의적 구도의 형성이 전개됐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구상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던가 양자 FTA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어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인 상황은 연구자들의 연구 테마로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적 시각에서 볼 때와 남북관계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함의가 비슷하거나 긍정적인 전개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상황전개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의 상황전개를 주목하는 것이죠. 일단 그런 재미있는 함의를 우리가 한 번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저는 이제 최근 8·15 이후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동북아외교의 전략이 확실한 무엇이 있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 구도 속에서 각 나라와의 양자관계를 접근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DJ 때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미관계의 적대성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풀리고, 정상회담을 뚫어 주고, 정상회담이 추동력을 가지고 조명록을 워싱턴에 보내고, 올브라이트를 평양에 보내도 그들이 안 풀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매번 남북이 아무리 공간을 열어놔도 북미가 넘어서지 못하면 도로 아미타불. 2차 북핵회의, 3차 북핵회의 모두 지금은 완전 엉망이 된 것이 아닙니까?

DJ-노무현 정권 때 한국 외교의 마지막 장애물은 북미관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인데, 지금 와서 드는 느낌은 이게 미중 관계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G2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미 남북관계를 놓친 상태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마치 북미관계를 노력은 하지만 해결은 못 하듯, 미중 관계는 노력하기도 힘들고 해결도 못하는, 양자에 끼인 형국이 되어버려서요. 그러면 DJ보다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DJ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건데 지금 박대통령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 외교거나, 제기되는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즉흥적 선택을 할 뿐이지. 종합적 그림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중국 전승절에 간 것도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간 것은 미국과 어느 정도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겠다는 식의 거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본도 이를 알고 있고요.

이원덕)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한국이 정교한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동북아 관계를 역동적으로 진행시켰다고 보긴 어렵지만, 예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베의 방미 순간입니다. 아베가 4월에 방미를 했을 때, 미일 밀월 관계가 확인되고, 안보에서는 가이드라인, 경제에서는 TPP, 역사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일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밀월관계를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저는 한국 외교가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은 어떤 눈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볼 것인가,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게다가 또 하나, 5월 중일 정상회담이 반등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한국은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교할 때, 올 6월 이후의 한국 외교는 나름 반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행보를 걷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미관계라고 봅니다. 미일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일 역사문제 제기에 대해 서서히 불편함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디 셔먼 등 미국 인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표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장)

명했고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8월 발표된 아베 담화에는 미국 배려, 중국 배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내의 진보파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한반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베는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애써 8·15 경축사에서 아베

담화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일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가상하다고나 할까요, 외교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계기의 전격적인 방중도 저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건인해 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우회적 과정으로 선택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3년 반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고, 한일 간 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면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역동적인 동북아외교를 통해 얻어진 공간을 향후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한일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의 해빙으로 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남기정 선생님의 2000년 대를 보는 시각과 연관해서 보면, 저는 2000년 당시와 지금이 크게 다른 것은 중국이 사실상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이전이냐 이후이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의 양강 구도 속에 한국이 갇히게 되었기 때

문에 더 어려움을 가중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사실 동아시아 지역 외교와 한일관계를 축으로 해서 남기정 선생님 말한 대로 소 삼각형을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새삼 부상된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약간 우려스럽고, 또한 북한도 좀 달라졌죠. 2000년은 김정일이 지배하던 북한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의 북한이니깐요.

남기정)

우리 외교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참 애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절실하죠. 우리가 미중관계 안에 틀여박혀 있는 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김기석)

이전 기간보다 지금이 좀 더 나아졌다는 관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볼 때, 우리 2000년대의 상황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기 동아시아 외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했잖아요? 그 기저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당시에 미국이 위기의 발생과 전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의 분노가 있었어요. 한 연구자가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라고 명명하기도 했었죠. 그 몇 년 사이에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궁리를 하게 됐죠.

물론 중국은 이것을 찬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중국이 전통적인 비동맹외교 노선을 버리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외교의 장으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아세안+3를 통해서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이 때 일본은 미국을 잊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의 역할에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동아시아 외교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한국은 어떤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세안+3의 장에서는 미국이 없는 외교를 그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무리 없이 관리하는 그런 복합적인 추동력으로 몇 년을 이끌어간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비단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소위, 강압외교(assertive diplomacy)를 시작하지요. 또 하나는 2005년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협력해서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서둘러 EAS를 만드는 과정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2001년 9·11 사태 이후 중동에만 신경쓰고 아시아를 너무 비워냈다고 판단한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 Asia)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현상은 동북아시아를 규정했던 또는 동아시아를 규정했던 강대국의 힘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완된 상태, 그것이 역내 국가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한국도 적극적인 지역외교를 추진할 공간을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중미관계의 틀이 형성되고 강고해지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공간이 좁아지게 된 거예요. 강대국의 규정력이 루즈한 상태와 타이트한 상태에 하에서 과연 한국은 어떠한 외교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근식)

미중 모두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DJ의 외교력이 한일관계와 남북 관계를 축으로 자기 이니셔티브를 채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 했듯이 북미는 넘어서지 못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이라는 세력구도가 생겨버리니까 우리에게는 공간이 훨씬 더 닫혀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근식(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석)

우리 중심으로 보면 기존의 아시아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 90년대 후반에 역할을 시작하게 되고, 한중일이 자기들끼리는 잘 안되니까 아세안한테 맡겨놓자 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G2 관계에 매몰되어 있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서너 가지 요소들과 전략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 동북아만 주장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식으로 함의를 찾는 것도 방법이란 것입니다.

남기정)

여기서 좀 더 이끌어가자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미국이 견제해 들어오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AS에 미국이 개입하는 게 2005년도 정도일 겁니다. 아미티지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긴장한 발언을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 2005년이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기예요. 독도 문제로 시작해서 말이죠. 이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라는 두 개 사안이 1998년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맞물려 있었지만 2005년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가 위기의 동북아 10년인데,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외교가 망가지는 1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를 시야에 두고 지역주의 다자외교와 주변국과의 양자외교를 같이 굴러가는, 그런 외교를 구상해봐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시도되었던,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국 외교에 그랜드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외교에서의 개별 현안들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전략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대전략이 없어서 원칙주의 외교에 기대어 현안을 절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원덕)

그랜드 디자인이 확고하게 있다면 대북외교에서 ‘핵 원리주의’, 대일 외교에서 ‘역사 원리주의’로 비춰지는 외교를 하지는 않겠지요. 목표와 우선 순위가 확실하게 있다면 오히려 방법론적으로는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택이 가능하겠지요.

∴ 한국 지역외교의 한계

김기석)

지역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기도 하고 외교부 관료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한국에는 지역을 그리는 DNA가 없어요. 학자들도 없고, 관료들도 없습니다.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다이나믹스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중심이 되죠.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몇 가지 지역구상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미 외교가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우리가 주도해서 뭔가 지역구도를 짜본다는 구상을 한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사실 최초의 독자적인 지역구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컨텍스트에 안 맞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기정)

동북아 균형자론이 제가 보기엔 지역주의 외교를 망가뜨린 주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셔널리즘의 과도한 발현이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외교에서 동남아시아가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지역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김기석)

당시의 지역외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계한 지역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식으로 지역정치의 컨텍스트에 안 맞았던 것이죠.

남기정)

한국 외교가 내셔널리즘으로 경사하면서 외교의 시야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김기석)

말하자면 브로드한 그림을 그릴 사람이 없었어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었는데 훈련도 준비도 안 되어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한일국교정상화 70주년이라고 해서 창이 열렸는데, 어려운 것을 풀었다는 점은 저도 평가하지만, 그것이 전략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컨대 최소한 이런 일련의 외교를 했다면, 이 속에서 한중관계나 한미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외교를 하는데 국내정치적 고려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국내정치에 손해 보더라도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덕)

대북과 대일이 같은 메커니즘 때문에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 아닐까요? 통일대박론은 나름 지지를 얻고 있고, 국내정치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8·25합의는 그래도 남북한 관계에서 보면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궤도를 수정해가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기대를 갖습니다만, 어떠신지요.

김근식)

통일 대박론이 국내용인 이유가 뭐냐면, 통일 대박론이 처음 나온 오리진을 보면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하다가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경제 이대로는 위기다, 4대기업 추진하고, 창

조 경제다 하면서 우리가 100년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죠. MB가 공간은 다 비워놔지 아무것도 없죠. 생각해보니 통일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푹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통일 밖에 없다는 결론이 그동안 자유주의적 생각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국내용인 거죠. 통일대박론에 국내 지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통일을 우선시하는 이슈는 야당이 선점하는 이슈거든요. 이걸 가져가버리니까 지지층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국내용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던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김정은 신년사하고, 금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가 남쪽에 통일을, 통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심차게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화의 제스처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촉구 한 거였는데, 북은 거꾸로 흡수통일 시도로 오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구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통일 외교와 평화 외교를 구분해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남북관계를 국내용이 아니라 북한을 파트너로 해서 풀어보려는 의도가 있다면, 통일을 내세우는 건 부담이 큼니다. 특히 8·25합의가 만들어 졌을 때, 북한도 그렇게 평가했지만, 화를 북으로 만든 극적인 합의도출인데, 이 8·25합의 이후에 그런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 통일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8·25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을, 모멘텀을 찾는 거거든요. 모멘텀을 찾으려면 그 통일대박론이랑 8·25합의 담론이랑은 또 배치되는 거예요. 통일대박론은 철저하게 북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중국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흡수하겠다는 기저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 채로 8·25합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8·25합의의 추동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통일대박론, 화해협력론, 이것의 상충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건

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속에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중국과 미국만 우리 편으로 하면 우리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우려 사항이죠. 그런 상황에서 8·25합의로 남북한의 대화를 하고 화해협력을 한다? 그건 상충된다 이거예요.

이원덕)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다음 수순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도 최근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내고, 미국하고의 관계개선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wishful thinking 일지도 모르겠지만 과거 2년 반 양상하고는 다른 궤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김근식)

북한 쪽에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7차 당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7차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는 거란 말이죠. 북한의 party state이라는 독재국가에서 36년만의 당 대회라는 것은 엄청난 축제의 장이에요. 거기에 김정은의 비전을 선포해야 하고 공식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순차적인 과제는 대외관계 정상화죠. 북중은 당연히 정상화해야 하는 거고,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정상화해야 하죠. 그런 대축제를 준비하는 북한으로서는 내년 5월까지의 대외관계는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어떻게는 관계를 풀고 대화의 제스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히려, 북한발 요인에서는 화해의 국면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 정부하기 나름이죠.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얼마나 맞장구를 치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

인가에 따라 열려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협정 제의하고 이런 것이요. 물론 미국은 평화협정에 시큰둥하지만 말입니다.



남기정)

평화협정 이전에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대안으로 부상할 텐데요. 저는 이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8·25 합의 바로 직전쯤 해서, 안보법제 논의가 한창일 때,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후쿠다 씨가 관방장관 시절에 있었던 북일 교섭의 뒷얘기를 풀어냈어요. 여기에서 후쿠다 씨가 한 얘기가,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이게 일시 귀국이었냐 아니냐, 즉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그 동안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일시 귀국이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일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교섭에서 일본이 약속을 위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에서 일본이 모종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안보법제 통과 이후 아베 수상은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거기서 북일관계 개선은 아베 수상에게 매력적인 카드죠. 북일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면 안보법제 성립 이후에 닦치고 있는 곤란을 헤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원덕)

오히려 북한 쪽은 남북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두는 행보를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원칙을 버려가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정은이 김정일이랑 다른 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체제란 겁니다. 김정일은 94년에 아버지가 죽고, 98년에 집권해서 그 시기, 집권 직후가 가장 위기상황이었잖아요. 아사자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이 해체하고 중국이 나가떨어지고, 천안문 사태가 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김정일 집권한 직후 사상 최고의 위기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는 묘하게 미중이 딱 다툼 국면이 되면서 자기가 움직일 공간이 많아졌고, MB 5년을 거치면서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시기란 말이죠. 경제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후계자가 짧은 기간에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부에 여러 불안 요소가 있지만. 김정은 스스로의 입장으로 보면 정치적 권력 자랑, 경제적 안정, 안보에 대한 자신감, 핵은 가지고 있는 거고, 핵물질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 거고, 미중 사이에 걸쳐있는데, 중국이 자기를 못 건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대화, 남한과의 대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지만, 거기서 자기 원칙을 훼손하고 싶은 거까지는 아닌 거죠. 제가 보는 김정은은 그래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계속 드레스덴 선언, 8·15 경축사, 지금도 계속 뭐 이런 걸해도 북한이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 자신

에 대한 제도 통일, 흡수통일이 아닌 것이라면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제도 통일, 흡수 통일이면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북일관계 진전되었던 것이 북중관계가 딱 막히면서 돌파구로서 러시아나 일본을 건드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아닌 건 아닌 것대로 고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정은의 대외관계 행보는 상당히 원칙적 입장에서 여기저기 시행외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원덕)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대북전략을 잘 가다듬는다면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근식)

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지금 공포정치를 벌이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정일 때는 김양건이든 최승철이든 통전부 일을 맡기면 그 사람한테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나서서 일을 맡았을 때 성과가 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좌천시키고 죽이고 이러니까. 선뜻 나서서 돌파하자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나마 김양건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김양건이 움직이는 통전부하고 과거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국방위 라인이 같은 경쟁적 관계에 있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여전히 통전부 라인보다는 국방위 라인이 센 것 같아요. 남한과의 군사적 강도가 최근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 다룰 분야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일본 전문가로서의 대체자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송일호만큼 그것에 대해 꿰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강석주가 부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해본 사람이 강석주 밖에 없는 것이니까 또 그쪽을 맡는 거고요.

그러나 성과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에 마원춘이 잘렸다가 다시 복귀했다라든지 예를 들어 강등시키고 이르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 젊어서 그런지 굉장히 성과위주예요.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신임을 주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퍼포먼스가 없으면 힘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세 번이나 전통본부에서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계속 미적거리는 게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어서죠. 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기가 힘든 거죠.

：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위한 과제

이원덕)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까? 내년 7월이 또 기회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정상회담까지 끌어가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나요?

김기석)

저는 가능성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막판에 여러 가지 물밑 작업으로 시도한 것이 있었어요. 북한이 이제는 자기들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취사선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원덕)

저는 우리 재계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기회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협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좀처럼 못 찾는 가운데서 대북 경험론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정치적, 경제적 돌파구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기석)

지난 7월에 전경련에서 남북교류 7대 원칙이 나왔을 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미국식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의미 있는 남북관계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재계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는 거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 이외의 새로운 것을 내놓았을 때는 적응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계가 북한을 기회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변화이고, 이것이 정치적인 필요와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구조의 변화, 재계의 관심이 있으니까 환경의 변화는 북한발 정세의 요구가 있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한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8·25 합의가 살아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밀고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저는 아직 자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8·25 합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데, 남북관계의 종착점으로 봐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현상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내년 총선이 있고 총선 결과 여하에 따라 임기 하반기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비공식 접촉, 비공식 접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물밑에서 북한과 만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 자체가 원칙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비공식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 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구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국면도 상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널리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 대통령이 그것을 깨고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는 두고 봐야겠다는 것이죠.

남기정)

이번 8·25 합의는 청와대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대리회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김근식)

당연하죠.

남기정)

그렇다면 만나서도 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근식)

원칙을 지키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원칙을 지키

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요.

남기정)

그러니까 만나겠다는 용기를 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원덕)

통일대박이 아니라 평화대박으로 바뀌야 되겠네요.

김기석)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북한에 갔을 때를 돌아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굉장히 외교가적인 자질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그것을 선거나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해석하면 조금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꽤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총선 이후의 정국인데, 사실 지금 야당 실력으로 총선은 어렵다고들 하죠.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승리한다고 하면,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약화된다고 봐야죠.

남기정)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이원덕)

국내정치에 의해 대북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근식)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

로세스도 그렇고, 그 내용이 DJ와 MB와는 좀 다른 성향이 있는 거죠. 일단 내용은 심플합니다. 양쪽의 신뢰만 쌓이면 DJ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의 첫 단추가 안 꿰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쓰는 말이 ‘신뢰의 벽돌 쌓기’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신뢰의 벽돌이 쌓였다면 그 다음 벽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또 하나는 8·25 합의를 2년 반 만에 이끌어 낸 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원칙을 강하게 지키니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강하게 지킨다는 것이 뭘니까. 2013년에는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해놓고 ‘격’의 문제로 성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통전부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했죠. 작년에는 10월 3일 날 황병서가 인천까지 왔는데도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분위기에서 각론에서의 원칙이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격’이라든지, 대북전단이라든지... 사실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원덕)

자. 그럼 한일로 옮겨가서 한일과 북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볼까요. 한일과 북일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기정)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가 원래부터 입구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법제가 7월에 중의원, 9월에 참의원에서 통과되어 안보법제 정국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현실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서 조금 숨통을 터보려는 외교로 나왔던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덕)

그런데 그건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남기정)

아베 수상 입장에서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 그렇고요. 한국도 안보법제가 한국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한일관계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날의 칼'론 이라고 해서 대북 역지력이 제고되는 반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한국의 대일외교는 역사와 안보 사이의 딜레마와 양날의 칼이라는 딜레마에 더해, 미중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한국 외교는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시키되 병진시키면서 풀어내고, 이로써 한일관계를 개선하되 이를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하고, 이어서 미중사이에서 한일관계를 지렛대로 균형을 잡는 그런 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일관계의 해법

이원덕)

대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대일 관계를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일 관계 속에서 한일이 경색된 상태가 지

속된다면 대미 관계에 까지 상당한 악영향이 있고, 악화된 한일관계는 한국의 대중 외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한일이 결국 대미, 대중외교 의 대응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일관계 악화는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중국이 역사 카드로 한일관계를 이간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미중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인데, 일본과의 교역이나 투자,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굉장히 주름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있는 부문은 관광, 교육, 무역, 투자 등의 영역이고 한일 관계가 차가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주름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일본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더러 또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대일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대북관계랄까 통일외교랄까 어쨌든 북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일본카드를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대북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어려움이 있고, 또 일본은 나름 북한 카드를 활용해서 오히려 한국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대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특히 최근 보수진영 쪽에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대일외교의 숨은 코드는 대미관계라고 보는 시각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균형외교인지, 외교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 영커 있는 대일 외교는 뭔가 풀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

안부 문제는 역사문제로 이게 한일관계 전체를 흔드는 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얄미운 아베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베 수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요.

김근식)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원덕)

전망이 그다지 밝은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

8·25 합의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한국 정부가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서도 아베 수상이 후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원덕)

후퇴라기보다 이번에 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타결의 시한을 연내라고 못 박고 싶었지만 아베 총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협상을 가속화해서 타결을 꾀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것도 아베 입장에서 보면 양보한 것이라면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일본의 진보파들은 이 합의에 상당히 환호했거든요. 여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던 아베가 박 대통령

의 요구에 응해서 그나마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베 정부가 만들어서 제시할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50점, 60점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아베 정부 하에서 100점짜리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공은 결국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른바 사사에 안(2012년 노다 정권 시 이명박 정부에게 제시했다고 알려진 위안부 해결 안으로 총리가 공식사죄하고 주한일본대사가 할머니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죄와 더불어 일정액의 금전을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알파를 고려한 해결안을 일본이 우리에게 제시할 경우 이를 우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두고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벌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를 받아들이고 관계 개선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차 버리고 소위 투 트랙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 트랙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의 투 트랙 외교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항상 그게 의심스러워요. 역사문제에서 영 찜찜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 있는데 경제, 안보문제가 협력이 잘 되겠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를 털어내는 게, 적어도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졸업시키는 것이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핵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기정)

투 트랙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털어내고 가는 것이 투 트랙인 건가요?

이원덕)

경제, 안보 문화 등의 이슈와 역사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는 외교를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속의 분리가 과연 가능한지는 여전히 문제지요.

남기정)

분리를 한다는 것은 역사 문제에서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에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원덕)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아베 수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60점짜리 해결안을 가져 왔을 때,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 타결로 간주하는 선택이 하나 있어요. 위안부 문제는 외교 쟁점론 이걸로 타결 짓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선택지 하나. 그럴 경우 한일관계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경우, 두 번째는 이 해결 안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부하고 차버리는 것이죠. 그 대신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극단적으로 경색시키는 것도 어려우니 일단 위안부 문제는 당분간 선반에다 올려놓고 유보해둔 채 안보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해나가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이죠.

남기정)

선반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오면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본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교섭을 지속하는 거죠.

이원덕)

그런데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는 한은 한일관계에서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의 가장 전면에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일본이 반쪽짜리 해법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해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흡하니 걷어 찰 것인지 우리로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걷어차게 되면 다시 줄기차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히게 된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김기석)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정상회담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원덕)

한일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너무 큰 쟁점이 되고 말았어요.

김기석)

아직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으로 5위가 됐습니다. 베트남보다도 작아졌어요. 갑자기 확 줄었죠. 3위가 홍콩, 4위가 베트남, 5위가 일본이 됐어요. 2위는 중국, 1위는 미국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게 많아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아는 어떤 외교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래서 이것을 풀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자해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인 부

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들을 풀어주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덕)

그게 어려움이라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관계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이제 대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니 대일 외교를 리세팅 하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이런 대일외교를 했고 그 잘못은 누구 책임인지 말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대협(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나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공식사죄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베 정부는 죽었다 깨나도 배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베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도 그건 못했습니다. 일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해결은 불가능하지요. 이게 한일 간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일본이 고노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총리 명의의 공식사죄를 하는 것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라고 간주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고려해야 할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인데, 지금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액수는 약 3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억 불도 아니고 30억 엔도 아니고 30억 원. 30억 원이면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 46분께 약 5천만 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명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고려하고 있는 명목은 인도주의적인 지원금, 사죄금, 속죄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명목의 금전지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 하겠어요? 대통령께서 피해

자가 수용가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베 정부의 안이 과연 거기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석)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학자들과 얘기하면 반고는 하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만족 할 것인가?”예요. 저는 만족하기 쉽지 않다고 대답하죠. 이것은 국민과 언론이 만족해주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아직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자꾸 역사문제에 대한 피로감 누적을 핑계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남기정)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해법을 과거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나왔던



총리의 서한입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문장에서 ‘도의적’이라는 말을 빼면, ‘わが国としては(우리나라로서)’로 시작되어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일본이 도의적 책임에서 나아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액수문제는 원

래부터 우리 측에서 일정 액수를 조건으로 내건 적은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설득을 시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규명 부분인데, 책임자 처벌을 당장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책임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할머니들과 한일 양국의 지원단체와 연구자들이 책임규명을 위한 연구 그룹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연구하고 규명해 나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구요. 제 식대로 하면 이것이 과거사와 기타 현안의 분리 병진 전략인데, 위안부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매듭짓고, 안보와 경제 등의 현안은 현안대로 진행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김근식)

여기서도 대통령의 원칙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의 과잉이랄까요? 남북관계에서도 그렇듯이 한일관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원칙만 내세우는 게 문제인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를 하는데 퇴로 없는 요구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원칙만을 내세우니 문제입니다.

이원덕)

대북관계하고 대일관계의 공통점이차 차이점은 국내정치적 기반입니다. 대북관계에서는 국내정치의 진보와 보수가 생각이 달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지만 대일관계를 둘러싼 국내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대일 강경론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일본과 타협하게 되면 거센 비판을 받기 십상이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만약 박 대통령이 대일외교에서 타협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

니다.

김기석)

요번에 역사교과서문제도 37%는 언제나 찬성을 하는 거죠? 그 37%가 대북 관계도 똑같이 강경으로 가는 것이고, 대일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기정)

대일관계는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7% 안에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37%라는 부동의 지지가 거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석)

네. 물론 그 구성은 어느 정도 다양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한일관계 혹은 국정화같은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기보다 그냥 무조건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거죠.

남기정)

대일외교에서의 지지를 그런 산법으로 보면, 37퍼센트에 몇 퍼센트는 더한 지지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원덕)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의 지지 구도와 대일외교의 지지구도는 다르지 않나요?

남기정)

그런가요? 3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원덕)

아시아 여성기금이 쓰고 남는 비용에다가 정부예산을 약간 보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어느 정도 국제적 표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수용소에 감금해 놓았던 일본계 미국시민들에게 약 2만 불씩을 보상했어요. 독일이 폴란드 출신 노동자를 강제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약 18,000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일본이 전 대만 출신 일본병사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약 200만 엔이었죠. 대체로 많아야 우리 돈으로 일인당 약 3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런 일련의 보상과정을 아는 일본정부가 수억 단위의 보상을 고려하는 것은 상상 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정서량은 안 맞는 거죠.

김근식)

우리 국민정서량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남기정)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표준에 호소해 온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구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원덕)

그래서 요즘 저는 김영삼 정권의 선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YS가 93년에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진실규명과 사죄 그리고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일본의 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금전적 보상조치는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있는 것이지 돈 문제는 아니라는 접근방법이죠. 도덕적 우위에 서서 대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기정)

그래도 법적으로 사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정한 액수는 필요하죠.

이원덕)

근데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아예 금전 포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죄와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일본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인정, 공식사죄, 세 번째가 금전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야기하는 금전 지급의 액수를 확인한 순간, 솔직히 우리의 국민 정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금액을 사죄금이 아닌, 보상적인 의미도 아니고, 위로금이다, 지원금이다 하고 해 버리면 우리 받아들이기 어렵죠.

김기석)

그럼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서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이원덕)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과 연관됩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라의 책임이라든지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역사적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론과 법적 배상론이 부딪치고 있는 거거든요.

김근식)

한·일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원칙과 원리가 맞부딪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북일관계의 전망

이원덕)

그렇죠. 그게 외교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북·일 전망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이 일본 사이드와 북한 사이드로 보시면 어떠신가요? 스톡홀름 합의 이후 일 년이 넘었는데 아직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향후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까?

남기정)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안보 법제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에 달린 것 같아요. 역설적이지만, 시민사회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

면 아베 수상은 어떤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예컨대 고이즈미 수상이 두 번의 방북을 했는데, 두 번 다 국내 정치에서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봤던 아베 수상도 그 카드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밀리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한 번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이미를 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납치자 가족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 안에서 태도가 약간 바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강경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씨의 부모도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북한과 교섭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식의 얘기를 하죠. 최대의 난관이 납치자 가족들인데,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스톡홀름 합의에서 조금만 북한이 성의를 보여준다면 일본 쪽에서는 적극적인 대북 접근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일본적 요인이 북한 정치에 필요 있다고 본다면, 북한 쪽도 작년에 일본하고 스톡홀름 합의를 했던 것도 그렇지만 대일관계가 꼭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파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돌파의 카드로써 북일 관계는 김정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죠. 문제는 우리 한일관계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놓을 수 있는 결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서로의 입장 차 복잡하고 너무 다르죠. 메구미 씨의 경우도 북으로서는 나름 선의를 가지고 유보를 준건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이제 북은 겁이 나는 거죠. 조사하는 건 괜찮은데 어디까지 용납이 가능할 것인가? 또 다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나 합의

가 가능한지,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북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이원덕)

아까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금전의 액수와 명목 문제로 큰 대립이 있다고 했는데 북일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톡홀름 합의를 잘 보면, 일본 측의 요구는 12명의 납치 인정자에 대해 뭔가 북한 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게 조건이지요. 그런데 북한 측은 이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안 들어 왔다고 하고 있으니 이 행불자 4명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근식)

12명은 이미 일본의 공식 입장이고, 북한도 4+8이 공식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풀려는 정치적 의지는 얼마든지 있죠. 필요도 있고. 거기서 어떤 지혜가 나와야 해요.

남기정)

근데 저는 우리가 간과하는 일본의 외교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북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성사시켰던 외교관인 이마가와 유키오(今川幸雄) 씨가 그의 저서에서 한 말 중에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일단 관계부터 맺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외교관이 주도하겠다는 기개가 당시의 외무성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외무성의 기개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일본 안에 그런 움직임은 늘 있어왔어요. 특히 아시아 외교에서 뭔가 주도해보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

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여러 경로로 접근하고 있는 걸 일본도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본이 아시아주의에서 나오는 외교를 한다면 이것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수상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베 씨 자신도 북일 국교정상화는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이것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아베 수상을 통해 뭔가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원덕)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은 경색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 먼저 풀 가능성도 있겠네요?

김기석)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 말들이 나왔었죠. 한국이 그런 상황전개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때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나 학자들도 그럴 의도는 없다고 하기도 했었죠.

남기정)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근식)

근데 방금 외무성 분위기도 얘기했지만, 고이즈미 키즈들이 많았다 빠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김기석)

대북 관계에 대해서요?

김근식)

네. 대북, 대한에 대해서요.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데요.

이원덕)

그런데 그게 강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일본도 동북아 다자외교 속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중, 한일이 막혀있으니까 북한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키 위해 여기저기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도 근린 외교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딘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북 관계를 돌파구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남기정)

역설적이지만 한일관계를 나쁘게 하는 게 거꾸로의 방식인데. 그런데 일본이 결코 그런 식으로 이념적인 외교를 하지는 않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해요. 그래서 아베 수상의 입장이 변한다면 외부성도 변할 겁니다.

이원덕)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북아외교는 대북, 대일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김기석)

풀어야 되죠. 최근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외교관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아이디어로 존재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았는데, 그런 돌파구가 하나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디서부터 풀 거냐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교의 주도권 문제도 좀 더 지평을 넓혀서 다양한 행위자들 속에서 우리의 그 전략을 융통성 있게 풀어가는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기정)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 외교의 부활로 보입니다. 지금 미중 사이에서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한 양자 외교는 그런대로 잘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일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멋있게 포장해야 합니다. 창조 경제가 아닌 창조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설정하는 국가가 한국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그림을 주변 국가가 공유하도록, 큰 그림을 만들고 설득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통일외교에서 평화외교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 대통령을 지향했고, 지금 한반도의 통일 대통령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동아시아의 평화 대통령이라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동아시아의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남북관계,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그러한 외교를 한다고 한다면 자칫 제로섬 관계가 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양자외교가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연결되어 복합외교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김근식)

북한의 대외전략이 김정은 시대부터 즉, 2010년부터 변했다고 제가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 전에 김정일이 집권해서 죽을 때까지의 15~16년 사이가 북한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이죠. 북한은 안보를 미국에게 주로 의존 했어요.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줘야 자기들이 개런티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은 남북관계를 통해서 일정부분 혜택과 지원을 받으려 했었다는 거죠. 김정일 시대의 북미 관계사나 남북관계사는 북미를 통해 안전을, 남북을 통해 경제를 챙기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게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도 잘 안 풀렸던 거죠. 남북관계도 정상회담 두 번 했지만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았고, 북미관계도 뭐 되다 말다 했죠.

김정은 시대의 경우는 이제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중사이에서 전략적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는 것이 강해요. 특히 중국이 커졌으니, 중국만 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듯이 미중 사이에서 안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화하자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남북도 만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지나면서 이제 남쪽 없이도 살게 된 거죠. 남쪽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남쪽 없이도 살아 왔고요.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대체재로써 충분히 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남북 관계 하지 않더라도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북미를 통해 안전을, 남북을 통해 경제라는 예전 패턴이 김정은 때 깨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북 입지가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 한다면 통일외교나 대북정책에서 통일을 우선시 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상대적 자신감과 경제적 호전 상황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서로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북한이 계속 남쪽이 대화하자는 걸 전부 정책으로 받아 들입니다. 경제 협력 별로 관심 없고요. 정치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나 하지 말라는 것, 군사적으로 서해상에서 한미 훈련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평화의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고 북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아젠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정치, 군사 아젠다에 관한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먼저 조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 동북아에서도 좋

죠. 정 반대로 되는 게 뭐냐 하면 평화의 담론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 끼어서 또는 중일 사이에 끼어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딜레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핵무기 늘려나가고, 고강도 미사일을 계속 실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드에 압력을 계속 받는 거죠. 계속 전투기 준비하죠. 계속 군비경쟁으로 미중 사이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평화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저는 대미, 대중,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덕)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자면 맥락은 같아요. 지금 정부의 동북아 외교의 발상법은 대미대중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를 경유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방향, 평양을 통해서 베이징에 가는 그런 발상의 역 발상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박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 만들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대북 관계, 대일관계를 풀어나가는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전략적인 발상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응해 왔고, 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의 대외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발상, 그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개별 이슈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식의 외교적 대응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전략중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풀어갈 수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구상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는 컨트롤 타워가 제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과연 있는지 걱정이

東北亞 平和

됩니다. 청와대의 NSC가 지금 우리 외교의 사령탑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NSC는 군사적인 측면의 대북 억지의 사령탑 기능은 하고 있지만 외
교전략 수립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나 기구가 전략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그
때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전략적인 큰 그림이 없는 가운데
산발적이고 즉응적인 형태로 대응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세 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日本空間)